

종합

주말 최고 80mm 폭우...가축 매몰지 초비상

영암·나주 등 110곳 빗물 유입 현실화 우려 비닐·방수포 덮고 배수로 추가 설치 등 분주

이번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북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닭과 오리 매몰지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6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휴일인 27일 밤까지 강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25일 예상했다.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30~60mm 수준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AI 관련 가축 매몰지가 빗물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우려하던 빗물 유입이 현실화할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내 가축 매몰지 가운데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매몰지 표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축사형태의 빗물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돌이나 콘크리트 축대도 없이 매몰지를 임시 지붕하도록 흩으려 쌓아놓은 듯이 붕괴하거나, 매몰지를 조성하면서 깎아낸 경사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영암과 나주 등 6개 시·군에 마련된 110곳의 매몰지에 닭과 오

리 320만 마리가 매몰돼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전남도가 최근 가축 매몰지 104곳을 긴급점검한 결과 64곳이 침출수 배출관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21곳은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부실매몰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위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매몰이 이뤄진데다, 날씨가 풀리면서 침출수 등에 따른 오염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상 변화로 4월까지 갈수기라는 보장이 없고 언제 어디서 대량 강우가 있을지 모른다"며 매몰지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방관서에 당부해 왔다. 환경부는 내달 원료를 목표로 부실한 매몰지 보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빗물이 매몰지에 스며들 경우 매몰지 침출수가 밖으로 넘쳐 주변 지

역 수질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질환경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약간의 빗물이 매몰지에 유입되더라도 침출수가 땅 밑으로 침투하는 속도는 그다지 빨라지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양이 유입될 경우는 침출수가 매몰지 밖으로 넘쳐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전국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가축 매몰지를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배수로 추가 설치하는 등 매몰지 빗물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긴급지시했다.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또, 호우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수현 yang@kwangju.co.kr

시설

지구촌 식량大亂 조짐 대책 서둘러야

국제 곡물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식량 대란(大亂)'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중 세계 곡물가격 지수는 244.8로 1년 전보다 무려 44%나 올랐다.

이는 식량가격 지수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예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지난 2008년의 수치를 뛰어 넘는 것이다.

식량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需給)의 불균형이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의 곡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식량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향후 10년간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라 식량 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에 대한 식량 안보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곡물 자급률은 2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적 과 기상이변으로 육류와 채소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경지면적조차 최근 5년 새 10만9000ha가 감소해 식량 생산 기반이 와해되는 것 아닌지 걱정 이 될 정도다.

이 같이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졌음에도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심지어 오는 2015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25%로 낮춰 잡기도 했다. 정부의 식량정책에 대한 인식이 합실할 정도다.

식량 전쟁에 대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을 지키고 부흥시켜야 한다. 국가안보나 경제성장도 식량기반이 무너지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살까지 이르게 한 일선학교 납품비리

광주시내 일선 학교에서 또 다시 납품비리가 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교육기자재 납품비리로 인해 학교장 등 19명이 사법처리되면서 모 중학교 행정실장이 자살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시교육청 간부와 납품업자가 입건되는 등 교육계의 납품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납품비리와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50대 교육청 간부가 투신 자살한데다 수사가 확대되면 관련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과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강조해온 장휘국 교육감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납품업자가 복구 소재 고교 2곳과 서구의 중학교 2곳에 총 40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학교 관계자들이 납품업자의 요구로 뇌물을 되돌려 준 것

까지 포함하면 관련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자살한 교육청 간부 역시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수기 납품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일선 학교의 납품비리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이라는 데 심각성이 크다.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겠는가. 지난 5년 간 3건의 대형 납품비리가 터졌는데도 교육청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청렴과 재발방지를 그렇게 떠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이번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자살이라는 충격을 몰고 온 납품비리는 이제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납품심사위원회 구성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 등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전북 과학벨트 포기 혁신도시 LH유치 전력

전북도가 새만금에 유치하려던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과학 벨트)를 공식으로 포기했다. 도는 애초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최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이 쏟아진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한 달여 만에 스스로 이를 철회했다.

정현을 행정부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유치 가능성이 적은 사업에 전력했다가 실패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 상실감도 클 것"이라며 "앞으로 과학 벨트와 관련된 모든 유치활동을 접고 LH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 벨트는 앞으로 7년간 3조5000여억 원을 투자,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을 비롯해 충청권, 경기권, 대구·경북권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강운태 광주시장은 25일 오전 중국 북경에 있는 캠프킨스호텔에서 4000만 달러 규모의 기업투자MOU와 5건의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中 LED업체 광주에 대규모 공장 짓는다

광주시투자유치단에 약속... 3D 애니메이션 제작 공동추진

중국 LED(발광다이오드) 업체가 3000만 달러 규모의 생산공장을 광주시에 건립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 및 우호협력사업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LED 전문기업인 베이징커번 관광전 유한공사로부터 3000만달러 규모의 광주 공장 건립을 약속받았다.

투자유치단은 이어 소림사를 비롯해 유·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허난성과 1000만달러 규모의 3D 애니메이션 제작 및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단으로 참가한 고등과학기술연구소는 중국 최대의 광학 연구기관인 중국과

학원 물리연구소와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고출력 레이저 분야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주지역 기업인 인터세이브는 중국의 조나단소프트에 100만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게임 및 웹 온라인 게임을 공급하기로 했다.

투자유치단은 이와 함께 중국의 500대 화상기업과 화상부호 등의 경제인으로 구성된 '세계 걸출화상협회'를 방문,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광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광주의 역점산업과 함께 최근 입지가 확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소개하고, 이 특구를 한·중·일 삼국이 참여하는 개방형 특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 등 광주의 역점산업에 중국의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화상협회 연구기관들의 광주 R&D(연구·개발) 특구 입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2011 일본·중국 투자유치 및 우호협력 활동'을 모두 마친 강 시장 일행은 이번 일정동안 일본 기타큐슈와 중국 다롄에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과 중국, 일본을 삼각축으로 하는 광주R&D특구의 기반마련에 주력했다.

강 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한·중·일 연구협력의 삼각축을 구축한 것은 오는 4월 확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중국에서 거둔 성과를 잘 관리해 '시민이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상훈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뤄진 표결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17표, 반대 6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19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밥값 좀 하시려나 모르겠다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보선

도선관위, 금품살포 의혹 조사

전남도선관위가 지난해 9월 처리된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보선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9월 15일 실시된 목포수협장 보선선거에서 당선자의 조직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과 목포·나주·영암·무안·함평군선관위 단속직원을 투입해 전체 조합원 2683명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위해 전체 조합원에게 '자수권유 공한문'을 발송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자진신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자수하는 조합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전교조, 헌법소원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심판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법칙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영역까지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침해금지원칙에 반하며, 선진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 "印尼특사단 사건, 국정원장 사퇴를" 총리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함께 노력해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국회는 2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북정책,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 등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조건부 해무장문을 거론하는 등 대북강경론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한시적인 핵 무장론이 공론화 되면 중국, 러시아가 북 핵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정몽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북 핵을 폐기할 수 없으며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추선 의원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방심원"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께 국정원장의 해임을 건의해야 하고 국정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남북이 전쟁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악화돼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 관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정부가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이 붕괴하는가,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될 뿐"이라며 "기다리지 말고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 사과가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며 "대북 압박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대담한 제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작정 수행 중 발각될 정도로 국정원의 일처리가 아마 추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박추선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질의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계기를 이룰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인 만큼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구체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